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소고*

김 석 진 (한국금융학회 회장, 경북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1. 들어가며

한국은 최빈국 수준에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성취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발돋움한 기적을 이룬 나라이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경제는 저성장과 고령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 과연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내리막길을 걸을지 하는 위기감을 갖게 되었다. 나아가 경제수준에 비해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으며, 가정에 대한 불안과 사회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그간 급격한 사회변화로 사회적 갈등이 심하다. 이미 심각한 이념간, 지역간 갈등에다가 세대간, 계층간 갈등까지 심각해지고 있다. 생산적 갈등이 아닌 이러한 소모적 갈등은 성장 동력을 떨어뜨린다.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가? 왜 어떤 때는 부유하고 어떤 때는 가난한가? 성장은 지속가능하며 후손들은 계속 부유할 수 있는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대다수가 행복한 경제적 발전은 어떻게 가능한가? 본인은 이 자리를 빌려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본질적인 문제와 과제에 대해 사색의 빌미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런 논의를 통해 한국이 더 부유해지고 한국인이 더 행복해지고 후손들에게 부유함과 행복함이 더해지고 지속가능하게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로써 정부지출 비중(*Govt*)은 경상지출, 자본지출, 순융자를 합한 수치를 *GDP*로 나눈 값이다. 국가직 9급 공무원 경쟁률(*Compt*)은 보상체계의 대리변수(proxy)이다. 연령중위수(*AgeM*)는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정렬하여 가운데 있는 연령이다. 소득불평등지수로서는 지니계수(*Gini*)를 사용한다. 중산층비율(*ClassM*)은 가처분 기준 중위소득 50~150%에

* 남아있을 여러 형태의 오류와 미비한 점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밝혀둔다.

해당하는 가구비율로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정렬하여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소득(중위소득)을 100으로 놓았을 때 50~150 사이 가구소득을 가진 가구의 비율로 측정된다. 불공정거래 건수(Unfair)는 유형별(거래거절, 거래상 지위남용 등) 사건처리 실적의 합계이다.

GDP 성장률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제시하는 실질 GDP 성장률이며, GDP 잠재성장률은 Jain-Chandra and Zhang(2014) 등을 참조하였다.¹⁾ 국가직 9급 공무원 경쟁률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서, 연령중위수, 지니계수, 중산층비율 자료는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불공정거래 건수는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연보에서 각각 구하였다. 지니계수와 중산층비율은 1990년부터 2012년, 불공정거래 건수는 1981년부터 2012년, 나머지 변수들은 1980년부터 2012년까지의 연평균 자료이다.

본고는 기존의 논문 서식을 벗어나 사색적으로 접근하며 방법론도 단순회귀분석을 사용한다.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 1>과 같다. GDP는 1980년 -1.89%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1981년부터 가파른 성장세를 회복하여 1980년대 중반에는 소위 3저 호황 등에 힘입어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민주화 이후 성장세가 다소 꺾이다가 1997년말 외환위기가 오면서 1998년에는 마이너스 성장(-5.71%)을 겪었지만, 이후 성장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미국 및 유럽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다시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저성장시대로 들어섰다. 이에 잠재성장률도 1980년대 중후반의 9.2%를 피크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3.3%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지출 비중은 1981년 24%에 이르렀으나 이후 1988년 16.2%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경제위기를 맞은 1998년과 2009년에는 각각 23.8%, 25.2%를 기록하였다. 2010년에 줄긴 했으나 이후 조금씩 증가하여 2012년에는 23%를 기록하고 있다. 국가직 9급 공무원 경쟁률은 1980년대 초중반 채용인원 감소로 증가하다가 경제호황기인 1989년과 1991년에는 14대 1이라는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에는 80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다가 다시 떨어졌으나 최근 강한 상승세를 보여 2011년에는 93.3대 1이라는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연령중위수는 의학 기술의 발달과 출산율 하락으로 인해 1980년 21.8세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2년에는 39세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지니계수는 0.25 수준에서 유지되다가 외환위기를 겪으며 0.28을 넘는 수준으로 확대된 이후 큰 개선을 보이지 않고 있다. 중산층 비율은 1990년대 초반에는 76%를 넘었으나 그 이후 감소세를 시현하여 현재 60%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건수는 1981년 15건을 시작으로 1990년 357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1997년 1,000건을 돌파하였다. 이후 감소하다가 2007년 1,285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에는 996건이 처리되었다.

1) GDP 잠재성장률은 Jain-Chandra and Zhang이 다양한 추정방법(Hodrick Prescott Filter, Baxter King Filter, CF Filter, Univariate Filter, Bivariate Filter)을 각각 이용하여 추정한 값의 평균값이다. 1980년부터 1990년까지 잠재성장률은 별도 IMF 보고서에서 구하였다.

<표 1> 기초 통계량

	<i>GDP</i>	<i>PGDP</i>	<i>Govt</i>	<i>Compt</i>	<i>AgeM</i>	<i>Gini</i>	<i>ClassM</i>	<i>Unfair</i>
평균	6.34	6.0	20.5	46.0	30.1	0.272	71.2	477
중앙값	6.75	7.1	21.0	44.0	29.8	0.277	70.3	452
최대값	12.27	9.2	25.2	93.3	39.0	0.295	76.3	1,285
최소값	-5.71	3.3	16.2	14.0	21.8	0.245	66.3	15
표준편차	4.08	2.1	2.31	22.2	5.2	0.017	3.4	354
관측수	33	33	33	33	33	23	23	32

주: *GDP*는 실질 GDP 성장률(%), *PGDP*는 GDP 잠재성장률(%), *Govt*는 정부지출 비중(%), *Compt*는 국가직 9급 공무원 경쟁률, *AgeM*는 연령중위수(세), *Gini*는 지니계수, *ClassM*는 중산층비율(%), *Unfair*는 불공정거래 건수를 나타냄.

2. 시장경제와 성장

인류가 지금과 같이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된 데에는 시장경제에 힘입었다고 하겠다. 시장의 존재는 수요의 다양화를 충족시키고 쉘페터(Joseph Schumpeter)가 주창한 기술혁신과 기업가정신을 유발시켜 효율성은 물론 성장성을 갖게 한다. 일찍이 지드(Andre Gide)는 공산주의의 계획경제는 개성의 상실과 획일주의로 실패할 것을 예견한 바 있다. 자본주의의 시장경제는 공산주의의 계획경제보다 훨씬 효율적임이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경제란 인간과 사회의 무한한 욕구를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하여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를 다루는 것이다. 파레토(Vilfredo Pareto)는 희소자원의 최적배분(Pareto optimality)은 완전경쟁시장의 가격체계를 통해 달성됨을 보였다. 이를 파레토의 배분적 효율(allocational efficiency)이라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효율적 경제를 위해서는 완전경쟁의 시장매커니즘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경영적 측면에서 보면 경제는 같은 량의 산출을 위해서 투입은 최대한 적게 또는 같은 량의 투입으로 산출은 최대한 많게, 즉 가급적 비용은 적게 생산은 많게 하는 것이다. 이는 최소투입 최대산출의 법칙이라고 일컬어지며 쿠프만스(T. C. Koopmans)의 운영적 효율(operational efficiency)이라고 한다.

정보적 측면에서는 시장이 현재의 모든 이용가능한 정보를 반영하고 있으며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이를 즉시 가격에 반영시키면 효율적이 된다. 이는 누구나 정보를 값싸게 쉽게 획득 가능하면 이루어지는데 이를 정보적 효율(informational efficiency)이라고 하며 파마(Eugene Fama)가 개념정리에 큰 기여를 하였다.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면 (사전적) 역선택(averse selection) 내지 (사후적)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하여 잘못된 배분과 대리비용(agency cost)을 유발시킨다. 다시 말해, 정보의 비효율은 운영의 비효율을 가져와 궁극적으로 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한다.

여기서 시장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면 (완전경쟁)시장은 정보를 투명하게 드러낸다는 것이다. 시

장을 통한 거래는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시장은 민주적이다. 예컨대, 주식을 사거나 빵을 사기위해 학연, 지연, 혈연 등이 있다고 가격이나 품질이 더 유리해지지도 않고 거래가 성사되기 위해 굳이 뇌물을 주거나 뒷거래를 할 필요가 없다. 시장참여자 누구나 동등하게 접근하고 거래할 수 있다.

경제가 발전한 선진국일수록 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고 정보가 투명하고 효율적이다. 경제가 뒤떨어진 후진국일수록 시장 인프라가 미구축되어 있고 정보가 불투명하여 비대칭적이다. 다시 말해, 경제가 발전하려면 시장을 발달시키고 정보가 투명하고 효율적이어야 한다. 21세기에는 정치적 형태는 다름지언정 지구촌의 거의 모든 국가가 시장경제를 시행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정보화 시대라고 할 만큼 정보가 넘쳐나고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시장과 정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정부가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인터넷 상에 모두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부정과 부패의 문제도 대부분 해결될 것이다. 투명성과 부정·부패는 역의 관계에 있으며 후진국일수록 부정·부패가 많다는 것은 쉽게 관찰할 수 있다.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를 최대한 적용시켜 선진경제의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상황은 시장경제가 확대되기는커녕 오히려 위축되고 있지 않나 우려된다. 그 한 예로 80년대 후반이후 정부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가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가계 및 기업이라는 민간부문은 작아져 시장경제의 영역은 작아지고 정부의 간섭으로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게 된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남의 돈으로 남을 위해 돈을 쓰는 경우가 대리비용이 가장 크다는 이론적 사실도 잊어선 안 된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부터 2012년까지 GDP 성장률을 GDP 대비 정부지출 비중(*Govt*)에 대해 단순회귀분석한 결과, 1% 유의수준에서 정부지출은 경제성장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명계수도 45.4%로 꽤 높았다. GDP 잠재성장률에 대해서 회귀분석해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3. 보상체계와 성장

한국사회의 한 문제는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열심히 일한 경제활동과 그 과실의 배분이 큰 괴리를 가진다는 사실이다. 상당한 일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한 데 비해 대가가 충분하지 않은 반면, 일부 특권층은 특혜에 힘입어 지나치게 많은 과실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보상체계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를 시장경제, 정보지대, 위험대가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인적 자원에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취직을 하면 같은 조건 하에서는 급여가 같다. 승진도 비슷하게 한다. 100을 일하고 150을 받는 자가 과다지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00을 기여하고 200의 급여를 받는 자보다 급여가 적다고 불평하는 사회다. 똑같이 월급 받는다

면 왜 열심히 일해야 하는가. 일을 안 하다 보면 누가 붙잡지 않으니 이 부서 저 부서 두루 다니고 연수란 연수는 다 찾아다니고 어학공부나 운동 열심히 하고 가정과 집안에 충실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뼈 빠지게 일하다가 건강까지 해친 자에 비해 성격 원만하고 건강하고 넓은 시야를 가진 유능한 인물로 나중에 반전되는 세상은 아닌지 생각해볼 일이다.

선생도 전공이 어렵거나 쉽거나 수요가 있거나 없거나 월급 수준이 거의 같다. 자본주의의 시장경제가 아니라 공산주의의 관료경제에 가깝다. 교사나 교수나 월급수준의 차이가 없으며 요즈음 신입교수의 평균연령이 거의 40세임을 감안하면 생애 총급여는 교사나 교직원이 교수보다 많게 된다. 이렇게 되면 누가 열심히 어려운 공부나 연구를 하고 교육에 애쓰겠는가.

더욱 심각하게도 자원배분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급 인적 자원에 대해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실력으로 올라가기보다는 비시장적 방법으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 결과 고객과 주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몸을 사리거나 아부를 하거나 줄을 서거나 비생산적으로 행동하는 대리문제와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부실을 초래하기도 한다.

권력층으로 시야를 옮기면 시장의 부재와 그에 따른 대리문제와 도덕적 해이가 거의 망국의 수준이 아닌지 우려된다. 헌법 제1조 제2항에서는 정치적으로 국민주권에 입각한 민주주의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의 정치인은 국민의 바람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려고 하고 있는지, 공무원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제7조의 정신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그네들에게 월급을 주는 국민을 우선과 기만으로 대하면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거나 않은지 모르겠다.

나아가 서비스 제공, 감독 및 조정 등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부정·부패, 간섭·압력 등 해서는 안 될 일을 함으로써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국민 부담을 초래하고 있거나 않는지 곱씹을 일이다. 뿐만 아니라, 권력을 바탕으로 공사, 공단, 협회, 연맹, 연구원, 개발원, 평가원, 위원회 등 주령주령 산하기구를 만들거나 이들 산하기구에 낙하산 인사로 내려와 입힌 피해에 대해서도 알아볼 일이다.

사법시험 등은 비시장적 행태의 상징이다. 컴퓨터보다는 분명 못하는 암기력을 무기로 ‘사람’이 내는 문제에 요령껏 잘 쓰고 합격하면 시장에서 뭐라고 하든지 평생을 보장받는다. 때문에 서울대학교가 고시학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인재가 이 시험에 매달려 있다. 고시촌이라는 희한한 말도 있다. 얼마나 많은 인재가 낭비되고 좌절되고 비정상적으로 되고 있음에도 그 그늘에 대해서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시험은 부적격자를 걸러내도록 하고 나머지 평가와 성과는 시장에서 결정지어져야 할 것이다.

모든 분야에 평가를 도입하였지만 거의가 시장의 평가가 아니라 관료적 평가이다. 그러다보니 끊임없는 편법과 부작용, 대책과 반작용의 진화만 있을 뿐이다. 진정한 목적을 위해 매진하기보다 평가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 일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평가의 주기가 통상 1년 단위이며 재임기간이 짧다보니 단기실적에 치중하여 미래를 위한 투자를 회피하게 되며, 문제가 있어도 본질적으로 해결하려고하기보다 문제를 외면하거나 재임기간 중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은폐하려하게 된다. 국

가나 공기업은 물론 금융업은 장기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기성과주의 때문에 발전은커녕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단초가 되고 있다. 경영자나 정치가가 대중주의(populism)에 입각하여 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기 임기 뒤의 장기적 결과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는 경향에 대해 견제가 되어야 한다.

둘째, 정보의 지대(rent)가 지대하다. 정보가 비대칭적인 사실은 한국 사회가 부자들은 존경하지 않는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다. 많은 부자들이 생산적 경제활동에 근거하기보다는 부동산 개발정보를 빼돌리는 등 부도덕한 특권적 내지 독점적 정보에 의해 치부하지 않았던가. 주식시장에서도 미공개 내부정보에 의한 거래로 수월하게 치부하지 않았는지. 정보를 투명하게 하여 배분의 왜곡과 불공평을 줄여야 할 것이다.

셋째, 위험(risk)에 대한 대가이다. High risk, high return! 위험이 높을수록 보상이 커야 한다. 다시 말해, 위험과 보상은 상충(trade-off) 관계이다. 그런데 한국사회는 이 관계가 성립하기는커녕 오히려 Low risk, high return의 사회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러니 젊은이들이 중소기업, 창업기업보다 대기업이나 재벌기업을 가고자 하고 대기업이나 재벌기업보다 공기업을 가려고 하고, 공기업보다 공무원이 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안정적이라 위험은 적고 보상은 괜찮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는 시장이 죽고 혁신이 죽고 열정이 죽고 역동성이 없는 사회이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이어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가 성장한다. 위험을 취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1980년부터 2012년까지 GDP 잠재성장률을 국가직 9급 공무원 경쟁률(*Compt*)에 대해 단순 회귀분석한 결과 1% 유의수준에서 9급 공무원 경쟁률은 경제성장잠재력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명계수도 54.1%으로 꽤 높았다. GDP 성장률에 대해서 회귀분석한 결과, 5% 유의수준에서 부의 관계를 보였다.

4. 고령화와 성장

한국은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를 뜻한다. 한국은 2017년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핵심생산인구(25~49세)는 2010년 처음으로 감소하였으며 향후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업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년 고용률은 스페인보다 낮아 27%를 겨우 넘는 정도이다. 고령화로 고령층이 증가하고 청년층이 감소함에 따라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 저하 등으로 노동생산성은 하락하는 반면, 복지 수요는 늘어난다. 한정된 자원이 점점 노인들에게 배분되면 성장은 떨어지게 된다. 노인층과 청년층이 윈-윈 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모색이 필요하다.

독일의 비스마르크 정부가 사회주의 물결에 대처하기 위하여 1889년 보편적 복지를 처음 도입

하였다. 그 때 평균수명은 45세였는데, 연금지급연령을 70세로 매우 보수적으로 정하였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하여야 하며, 특히 남북이 통일될 경우 복지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 이상의 복지는 생산적이고 성장의 선순환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가난한 자나 아이들이 기회를 가져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젊은이들의 벤처 창업과 해외진출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고 정치 참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좋은 기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어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한다. 젊은이들이 도전하지 않는 이유는 실패의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취업 시 벤처 창업경력이 있으면 가산점을 주는 제도도 검토할 만하다.

1980년부터 2012년까지 GDP 성장률을 고정화지수로 갈음할 수 있는 연령중위수(*AgeM*)에 대해 단순회귀분석한 결과, 1% 유의수준에서 부의 관계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GDP 잠재성장률을 연령중위수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 1% 수준에서 경제성장잠재력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명계수가 무려 77.1%에 이르렀다.

5. 불평등과 성장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상당수가 가난한 사회는 번창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다고 갈파했다. 시장경제의 결과 일어나는 지나친 부의 불평등과 소비중독 등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는 정부의 개입과 교육으로 시정되고 절제되어야 한다. 시장경제가 장기적으로 균형 있게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선 정부차원의 규제와 개입은 물론 개인 또는 민간차원의 자발적 조정과 자선 등이 필요하다.

경제적 양극화가 진행되어 불평등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연구결과, 불평등이 심할수록 성장의 지속(spell of growth)이 짧다(Berg and Ostry, 2011; Ostry, Berg, and Tsangarides, 2014). 부자들은 어차피 소비가 크게 변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산층이나 그 하위층은 소득이 줄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산층 이하의 소득감소는 성장감소로 연결된다. 또한, 불평등이 심화되면 사회적 갈등도 증대하게 된다. 갈등과 불평등을 줄여 성장의 폭과 지속성을 높여야 한다.

한국의 조세제도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소득재분배 기능이나 경기안정화 기능을 하는 세금을 올리거나 발굴하고 시장거래를 위축시키거나 소득재분배에 역행하는 세금은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 “사회주의의 문제는 사회주의, 자본주의의 문제는 자본가”라는 격언이 있다. 자본가의 지나친 탐욕과 비윤리적 행위는 제어되어야 한다. 정보와 지식의 비대칭, 금융 및 법률 서비스의 불평등 등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거나 착취가 일어나지 않도록 규제되어야 한다. 물론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괴물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1990년부터 2012년까지 GDP 성장률을 소득불평등지수로 갈음할 수 있는 지니계수(*Gini*)에 대해 단순회귀분석한 결과, 1% 유의수준에서 부의 관계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GDP 잠재성장률을 지니계수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 1% 수준에서 경제성장잠재력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명계수가 72.7%에 이르렀다. 또한, GDP 성장률을 중산층 지표인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상 150% 미만인 중위소득비율(*ClassM*)에 대해 단순회귀분석한 결과, 5% 유의수준에서 정의 관계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GDP 잠재성장률을 중위소득비율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 1% 수준에서 경제성장잠재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명계수가 77.7%로 매우 높았다.

〈표 2〉 각 변수가 GDP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변수	<i>Govt</i>	<i>Compt</i>	<i>AgeM</i>	<i>Gini</i>	<i>ClassM</i>	<i>Unfair</i>
패널 A : $GDP_t = \beta_0 + \beta_1 X_t + \epsilon_t$						
상수	30.867** (6.34)	9.757** (6.32)	17.120** (4.44)	35.745** (3.30)	-32.598* (-2.30)	10.022** (11.27)
<i>X</i>	-1.201** (-5.08)	-0.074* (-2.44)	-0.358** (-2.83)	-111.559** (-2.82)	0.533* (2.68)	-0.007** (-4.76)
R^2	0.454	0.162	0.205	0.274	0.255	0.430
F값	25.77**	5.97*	8.02**	7.92*	7.18*	22.63**
패널 B : $PGDP_t = \beta_0 + \beta_1 X_t + \epsilon_t$						
상수	18.851** (7.88)	9.178** (15.72)	16.656** (15.73)	28.182** (9.08)	-25.944** (-7.15)	8.113** (19.70)
<i>X</i>	-0.629** (-5.41)	-0.069** (-6.04)	-0.355** (-10.22)	-84.949** (-7.47)	0.435** (8.55)	-0.005** (-6.52)
R^2	0.486	0.541	0.771	0.727	0.777	0.586
F값	29.26**	36.51**	104.38**	55.82**	73.07**	42.52**

주: 1) **, *는 각각 1%, 5%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2) 괄호 안은 t값임.

6. 공정성과 성장

시장경제는 완전경쟁시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온다. 시장이 독과점 상태가 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지나치거나 힘의 논리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공정거래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초과이득인 지대(rent)를 누리고 사회의 공정성은 저하되고 성장 동력도 떨어지게 된다. 시장경제란 약육강식의 논리가 아니라 기회의 균등과 공동체의 윤리와 공정성과 소비자 보호와 생태계 유지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시장참여자 자기가해를 합리적으로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그러한 전제조건은 국가나 공동체에서 마련되고 지켜져야 한다.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보되지 못해 기회의 균등(equality), 과정의 공정(fairness), 배분의 공평(equity)이 무너지면 사회적 갈등은 심화되고 성장 동력을 잠식하게 된다. 비주류, 소외자, 탈락자, 장애자도 주류와 동등하게 인권이 존중되고 동등하게 취급받아야 한다. 시장은 그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동등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국가는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유지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이다.

기회의 균등이란 기회가 모두에게 균등하게 주어지고 주어진 기회에서 이길 가능성(winning chance)이 모두에게 50%가 되는 것을 말한다. 골프나 바둑에서 핸디캡을 주는 거와 같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쟁이 마치 헤비급 권투선수와 라이트급 선수와의 경기처럼 그대로 두는 것도 불공정할 수 있는데 재벌기업들이 모자 또는 자매기업들끼리 서로 도우면 이건 부당한 일이다. 신체 장애자와 정상인을 같은 출발점에 놓고 달리기를 하게 할 수는 없듯이 덩치에 맞추어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1981년부터 2012년까지 GDP 성장률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한 불공정거래 건수(*Unfair*)에 대해 단순회귀분석한 결과, 1% 유의수준에서 부의 관계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GDP 잠재성장률을 불공정거래 건수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 1% 수준에서 경제성장잠재력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명계수가 58.6%에 이르렀다.

7. 자유주의의 진화

시장이나 국가냐? 즉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나 통제하는 손(grabbing hand)이냐? 역사적으로 현대의 시민사회는 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과정에서 탄생하고 성장하여왔다. 국가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자원배분에 직접 관여하던 시절로부터 국가와 왕의 횡포에 대항하여 인권을 중심으로 기본권을 확보하고 사적 소유를 확보하였다. 자원배분은 국가가 아닌 시장에서 이루어지도록 발전해왔다. 이와 같이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과 사유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와 시장경제는 수레의 양 바퀴처럼 오늘날의 부를 형성하게 된 두 원천이다.

그런데 개인의 자유와 사유권을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는 지나친 개인주의로 공동체 붕괴 현상을 가져오고 물질주의로 정신의 파괴를 가져왔다. 그리고 시장은 결코 만능이 아니었다. 시장에서 평가되지 않는, 값이 매겨지지 않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밀려났다. 예를 들면, 후세대는 목소리가 없으니까 당세대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근시안적 배분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자원을 낭비하는 체제가 되어갔다. 당 세대에서도 양극화가 초래되었다. 즉, 목소리 큰 자가 목소리 작은 자를 착취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에 대한 반동으로 공동생산과 공동소유를 바탕으로 하는 공산주의가 태동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그 화려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가주의의 다른 형태에 다를 아니었다. 국가주의는 결국 독재로 이어졌고 공동체란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은 탄압받고 국가에 의한 자원배분은 결

국 경제의 비효율과 피해를 가져와 더 이상 존립할 수 없게 되었다.

공산주의는 존립할 수 없더라도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회주의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다. 자본주의도 복지와 생존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수정되었다. 이제 세계 모두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내세우고 복지를 도입하게 되었다. 다만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자유민주주의와 공동체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사회민주주의로 나누어졌다.

공동체 자유주의나 시장경제 사회주의는 일면 좋아 보이나 철학적으로 모순되는 두 개념이 결합된 것이다. 그 둘이 마치 대립된 듯이 보이나 사실은 추구하는 바가 같게 되어버린다. 공동체주의는 사회주의와 다름 아니고 사회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계획경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시장도 국가도 아닌 제3의 부문을 생각할 때이다. 우리가 오랫동안 이분법에 갇혀 있고 있었던 자치(self discipline) 또는 자율(self control) 영역이다. 자발적 손(voluntary hand)이다. 이익을 좇는 시장도 아니고 통제하는 국가도 아닌 스스로 공동체를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고 봉사하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영역이다. 칸트의 순수이성과 맥을 같이하는 성숙한 시민정신이 발로되는 사회이다.

국가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나를 간섭하고 통제하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전제이다. 내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간섭받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이길 원한다. 그렇다고 나를 나의 이익을 좇아 행동하는 경제적 동물로만 한정시켜 인식하는 것도 참기 어려운 전제이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나 안에도 수많은 내가 상충하며 불안정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런 연유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전제할 수가 없다. 이를 통제하고 나를 보호해주는 국가가 필요한 소이다.

그런데 국가가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감시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하도록 하게 해서도 안 된다. 국가는 그런 일이 발생한 사후에 개입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그 때 이미 나는 피해를 본 상태이다. 또한 국가가 자비로운 손이 될 수도 없다. 국가가 무엇을 한다는 것은 국가 스스로는 무엇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구성원 모두가 삼시일반으로 낸 소위 세금으로 운영된다. 다시 말해, 국가의 역할이 커질수록 내가 내는 세금은 커지고 그에 따라 내 돈으로 나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이익을 얻는 결과가 되어버린다.

자치는 이런 면에서 비용 효율적이며 효과적이다. 내가 직접 참여하고 사전 예방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내가 교수로서 비록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 컨닝(cheating)을 잘 하는 방법, 뇌물을 잘 받는 비법 등의 책을 쓸 수는 없지 않은가. 이와 같이 인간은 자율적으로 스스로를 통제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인간이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스스로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는다. 법은 불완전하고 사후적일 뿐이다. 스스로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을 지키는 인간 본성이 없다면 사회는 훨씬 나쁘고 공동체는 엉망이 될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현재의 자본주의를 극복, 구원하기 위해 공동체의 복원을 도모하고 있다. 새마을

운동은 자치, 자립, 자조 정신을 기반으로 공동체의 번영을 추구한 운동으로 새롭게 되새겨야 할 녹색 발전의 훌륭한 유산이다. 한국은 2011년 말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공동체 정신을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안전행정부는 마을기업, 노동고용부는 사회적 기업을 관장, 추진하고 있다.)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선, 시장에 의한 경제적 동기를 기본으로 하되, 시장실패를 막기 위해 정부에 의한 정치적 동기로 보완하고, 나아가 시민정신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 동기를 진작시켜야 한다. 시장의 경제적 동기와 정부의 정치적 동기뿐만 아니라 성숙한 개인과 사회의 자발적 동기를 장려하는 사상을 필자는 공화자유주의(republic liberalism)라고 명명한다.²⁾

대한민국의 영어표기는 Republic of Korea이다. 리퍼블릭이란 말은 ‘공적인 일’을 뜻하는 라틴어인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에서 나왔다. 한자어 공화(共和: 함께 공, 화할 화(며 화(禾)+입구(口))는 ‘함께 끼니를 해결한다.’는 뜻으로 역사적으로는 중국 주나라 여왕(厲王)의 폭정으로 반란이 일어나자 왕은 도피하고 제후들이 힘을 합쳐 나라를 다스렸다는 ‘공화시대’에서 유래하였으며, 19세기 일본의 학자들이 republic의 번역어로 채택하였다.

공화제란 미덕을 갖춘 시민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양보하여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이다. 한편, 멸사봉공(滅私奉公)은 전체를 위해 사적 이익의 희생을 강요하는 전체주의나 파시즘 또는 제국주의의 정신으로 큰 차이가 있다. 공화가 필요한 이유는 개별적으로 이익이나 전체적으로 손실이 되는 행동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전체가 잘못되면 궁극적으로 개인도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이 그간 산업화(industrialization)와 민주화(democratization)를 성공적으로 이룩하였다면 앞으로 가야할 길은 공화화(republication)가 아닌가 한다. 그런 점에서 세계사적으로도 만연되고 있는 양극화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리하여 공동체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공화자유주의를 제창한다.

8. 맺으며

역사적으로 시장경제와 자유주의의 효과성과 효율성은 이미 검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대중주의에 따라 각국의 정부는 어느 때보다 비대해져 총 GDP 대비 비중이 점점 커져 많은 선진국들의 경우 그 비중이 이미 40%를 넘어섰다. 이렇게 정부의 비중이 커져만 가는 것은 지속가능하지도 않으며 지나치게 비대한 정부는 시장경제와 자유주의를 훼손하여 비효율과 기

2) 아담 스미스의 고전적 자유주의의 대안으로써 1859년 자유론을 발간한 밀(John Stuart Mill)의 진보적 자유주의, 오이켄(Walter Eucken)의 질서자유주의, 뢰프케(Wilhelm Röpke)의 인본적 자유주의, 하이에크(Friedrich A. von Hayek)의 진화적 자유주의, 부캐넌(James M. Buchanan)의 헌법적 자유주의,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의 통화주의, 샌들(Michael Sandel)의 공동체주의 등 다양한 논의가 있어왔다.

본권의 침해를 가져올 것이다.

본고는 한국경제의 성장요인을 간단히 살펴본 결과, 정부가 커질수록,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회일수록, 고령화가 될수록, 소득불평등이 커질수록, 중산층이 작아질수록, 거래가 불공정할수록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한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경제와 자유주의에 입각하여 작은 정부, 높은 위험-큰 보상의 보상체계, 고령화 대책, 양극화의 완화, 중산층의 확대, 공정성 확보 등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 외에도 교육, 금융, 혁신, 개방성, 투명성, 유연성 등 다양한 요인이 있겠으나 이는 미래의 논의로 남겨둔다,

물론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만능도 아니다. 시장이 원만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규칙이 확립되어 있어야 하고 그 규칙이 엄정하게 지켜져야 한다. 자본주의의 시장경제는 사유재산권을 바탕으로 경제참가자들이 자유로이 활동하게 하므로 많은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법적 시스템은 자본주의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버팀목이라 할 수 있다. 자유방임자인 것처럼 알려진 경제학의 원조 아담 스미스는 원래 법윤리학자로서 누구보다도 시장의 전제조건으로서의 규칙에 대해서 강조하였다. 보이지 않는 손은 그 규칙 안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기이해(self interest)를 추구하는 행태인 것이다.

또한, 시장이 독과점적이거나 시장참가자가 비합리적이거나 정보가 비대칭적이면 적절한 시장가격을 형성할 수 없다. 특히 비물질적인 환경, 정신, 문화 등은 적절히 가격이 매겨질 수 없어 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물질지향적인 경향을 띄게 되고 비물질분야의 황폐를 가져올 수 있다. 최근 환경적 비용을 내재화하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게다가 자본주의는 확대재생산을 추구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단기적으로 효율적일지라도 장기적으로 유한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유한한 지구를 보전하고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조절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에 필자는 대안으로써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자발적 손과 공화자유주의를 주창한다. 향후 많은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김석진, 『현대생활과 금융』, 도서출판 청람, 2013.

Berg, A., and J. D. Ostry, Inequality and Unsustainable Growth: Two Sides of the Same Coin? *IMF Staff Discussion Note*, 2011.

Jain-Chandra, S., and L. Zhang, How Can Korea Boost Potential Output to Ensure Continued Income Convergence? *IMF Working Paper*, 2014.

Ostry, J. D., A. Berg, and C. G. Tsangarides, Redistribution, Inequality, and Growth. *IMF Staff Discussion Note*, 2014.